



막장으로 가는

김환영의

不通행보

입다물어!

88%의 입을 막아라?

박근혜 정부의 불통 행보 따라가기일까? 김환영이 사상 초유의 내부언론 탄압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그는 본부장 시절 88%의 불신임을 받은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을 불신임한 88%의 뜻을 헤아려 소통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전자계시관리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동원해 코비스 게시글을 맘대로 삭제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사람들이 못 보도록 해 쓴소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지금도 노동조합이 '제안/아이디어'나 '알림마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법무실 직원들이 '노동조합'으로 계속해서 윗글을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정치 공작 글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제목	작성자	부서	작성일
●[공통성명]내부언론 탄압 코비스 통제, 연대 투쟁으로 분! KBS본부	노조	KBS본부노조	2013-11-25 09:00
●[공통성명]내부언론 탄압 코비스 통제, 연대 투쟁으로! 노동조합	노조	KBS노동조합	2013-11-25 09:00
●코비스 글, 규칙 대로 하라!	성창경	디지털뉴스국	2013-11-22 11:02
[권오훈 합설] 대전, 청주출국 유세 - 신규 조합원 3명 가입	권오훈	KBS월드사업	2013-11-22 10:21

어제(25일) 아침 9시 양 노조가 올린 공동성명서

제목	작성자	부서	작성일
[권오훈 합설] 발간, 춘천출국 유세 현장	권오훈	KBS월드사업	2013-11-25 10:28
<전국기법 설명> "차라리 지역 뉴스를 없애라" (1)	송승룡	보도국(춘천)	2013-11-25 10:01
●코비스 글, 규칙 대로 하라! (2)	성창경	디지털뉴스국	2013-11-22 11:02
[권오훈 합설] 대전, 청주출국 유세 - 신규 조합원 3명 가입	권오훈	KBS월드사업	2013-11-22 10:21

잠시 후 오전에 게시물을 삭제해 '노동조합'으로 옮겨버렸다

지금은 노동조합 게시물을 표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각 협회나 단체, 그리고 개인의 글들을 검열하고 통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앞으로 사장이나 고위 간부들의 마음에 안 드는 글은 회사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고 삭제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까지도 하겠다는 의도다. KBS는 지금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

단협 위반,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

지난 9월 말 경 법무실(실장 안희국)은 양 노조에 안내문을 보내 9월 17일 '전자계시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기존 지침에서 중복 게시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했다. 또한 '게시금지'가 명백한 경우 전자계시 운영부서(법무실)가 직접 게시글을 삭제조치 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다. '게시금지'의 사유로는 '보안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공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명

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내용' 등 자의적인 조항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전자계시관리위원회에서 게시금지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할 경우 마음대로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표적으로 해 지난 18일부터 '제안/아이디어', '알림마당'에 있는 글을 모조리 '노동조합'으로 옮기고 있다. 중복게시는 구실일 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두 게시판에 노동조합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반발이 확산되자 사측은 지난 22일 코비스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다. 아예 코비스의 틀을 바꿔 언론을 차단하겠다는 것. 정상적인 절차라면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만들어가야 하나 먼저 지침부터 일방적으로 바꾸고 문제가 되니 그때서야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다. 일단 막고 보자는 의도다.

이번 지침 개정은 또한 단협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단협에는 노동조합 게시물을 협의 없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평균 조회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글들을 몰아넣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삭제 조치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연대투쟁으로 내부언론탄압 분쇄해나갈 것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내 각 협회, 노동조합들과 연대해 언론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야만적인 탄압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난 금요일(22일)에는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집행부가 담당 본부장인 권순범 정책기획본부장을 항의방문했다. 권순범 본부장은 이 조치가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리모델링 전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조치는 먼저 중단해달라는 양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어제(25일)부터는 양 노조가 공동으로 코비스 통제 규탄 아침 피케팅을 하고 있다. 양 노조는 조합활동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조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비스 개악 시도를 막을 것이다.



코비스 통제 규탄 언론노조 KBS본부·KBS노동조합 피케팅 (11.25)

다음 주 월요일(12/2)부터 정·부위원장 선거

12월 2일(월)~12월 6일(금) : 부재자 및 본 투표

12월 6일(금) : 당선자 공고 (12일까지 이의신청)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의 코비스 통제 만행사

정통성 없는 이들의 치졸한 꼼수

2000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코비스는 조금씩 진화를 거치면서 정보전달과 공론의 장(場)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2008년 이병순 사장 등장 이후 이 공론의 장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있어 왔다. 정통성 없는 낙하산 사장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가려보려는 치졸한 꼼수였다.

1. 이병순 : 보도정보게시판 실명제 전환



2008년 8.8 사태로 정연주 사장이 축출되고 낙하산으로 낙점된 이병순의 취임식 이틀 전인 8월 25일, 코비스에 '코비스 전자게시 관리위원회에서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최근 사내의 각종 이슈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표현의 글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부의 갈등을 깊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운을 댄 뒤, '○자신의 글에 찬반의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알림마당'게시판에 등록 ○같은 내용의 글 여러 게시판에 중복 등록 자제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전자게시판리지침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적극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이병순의 KBS 입성을 앞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병순 사장도 코비스를 드러내놓고 통제하지는 못했다. 대신 '보도정보게시판'에 수술이 가해졌다. 2009년 2월 6일 김종률 보도본부장은 '익명 게시판의 실명제 전환 공고'라는 글을 올려 보도정보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찬반 투표와 조회수 표시도 없어졌다. 기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협회장(민필규)의 아이디어로 글을 올렸다. 이른바 '민필규 게시판'의 등장이다.

그러자 사측은 한 사람이 하루에 게시글을 두 개만 올리도록 하는 옹색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항의의 목소리를 막았다. 보도정보 게시판 실명제가 실시된 2009년 2월 6일은 양승동, 김현석, 성재호 파면·해임 사태(1월 16일)가 벌어진 지 꼭 3주가 되는 날이었다. 결국 보도정보게시판 실명제는 사원행동 학살에 대한 사내외의 여론에 놀란 이병순과 부역간부들이 언론을 틀어막기 위해 행한 협박이었던 것이다.

게시글 제목	게시판	작성일
회사가 코미입니다...	민필규	2009/02/06
<기업 실명제> 강제 실명제 불 즉각 철회하라..	민필규	2009/02/06
나름 안성 100만 근로	민필규	2009/02/07
나름 나도 안표 (남은무)..	민필규	2009/02/07
본부장 올 통 사주세오..	민필규	2009/02/06
나름 안성 100만 근로 (남은무)..	민필규	2009/02/07
공회 민필규 게시판 계통..	민필규	2009/02/06
나름 * * * * 본부장 머리 아프겠다..	민필규	2009/02/06
항의차임으로 민필규 통일 제안합니다..	민필규	2009/02/06
나름 안성 1호..	민필규	2009/02/06
게시판 익명화 반대..	민필규	2009/02/06
나름 안성 1호..	민필규	2009/02/06
속시원히 알립니다. 그렇게 팔리는게 많습니까?..	민필규	2009/02/06

기자협회장 명의로 올린 실명제 전환 항의의 게시글(2009. 2.)

2. 김인규 : 코비스 못 보게 하기 공작

전자게시판리지침 2009년 11월 24일 출근지지를 뚫고 KBS에 입성한 김인규 특보사장은 코비스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2010년 6월 코비스 관련 부서가 IT개발운영팀에서 홍보실로 바뀌었고, 그해 12월 다시 법무실로 바뀌었다. 2010년 6월 이준안 씨가 법무실장을 맡으면서 법무실이 새노조를 탄압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코비스의 운영권한이 홍보실, 법무실로 넘어가면서 코비스에 대한



통제도 점차 더 강화됐다. '전자게시판리지침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고, 이후 게시글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댓글 하나 달았다고 징계를 하는 일도 생겨났다.

2011년 1월에는 '미열람게시판'에서 '제안/아이디어'와 '알림마당'을 제외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비스를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미열람게시판'을 클릭해 글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두 게시판을 제외시켜버린 것이다.

그리고 2011년 2월에는 전자게시판 관리지침을 개정해 게시물을 사측이 자의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떻게든 '제안/아이디어'나 '알림마당'처럼 사람들의 참여가 높은 게시판을 못 보게 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가 MBC, SBS, 연합뉴스,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등 6개 언론사의 사내 게시판 운영실태를 조사해보니,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두고 있는 곳은 단 1군데도 없었다. (2011.2.15. 31호 노보 참고). 그런데 KBS는 계속해서 '관리지침'을 개정하며 사내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던 것이다.

3. 길환영 : 코비스 통제의 완결 시도



길환영 취임 이후에도 코비스에 대한 게시물 통제는 계속 이어졌다. 편 글을 올렸을 뿐인데도 임의로 삭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징계를 시도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노보에서 밝혔듯이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게시 보류'를 남발해 실질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또한 9명의 '전자게시판리지침위원회'가 게시물 이동,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9명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2013.11.18. 124호 노보 참고).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조합 게시물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년 전 도둑출근으로 취임식을 마친 길환영 다운 행동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악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이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코비스 등 전자게시 통제 과정

- 2009. 2 보도정보게시판 실명제로 전환
- 2010. 6 코비스 검열 시작 (IT개발운영팀→홍보실로 담당 이관)
- 2010. 12 코비스 검열 강화 (홍보실→법무실로 이관, 전담 직원 발령)
- 2011. 1 미열람게시판 변경 : 모든 게시판→업무공지, 수신료 (제안/아이디어, 알림마당, 경조사 제외. 경조사는 다시 포함했으나 두 게시판은 아직까지 제외됨)
- 2011. 2 관리지침 개정 : 게시물을 사측이 자의적으로 이동 가능
- 2013. 9 전자게시판리지침 일방 개정 : 중복게시 완전히 금지, 노동조합 게시물 제안/아이디어, 알림마당 게시 금지
- 2013. 11 관리지침 개정 일방 시행. 향후 코비스 '리모델링' 예정.

공정성특위 활동종료 D-3일

- 29일(금) 전국 조합원총회 개최

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제도 변경, 방송 공정성 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국회공정성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공정성특위는 2012년 KBS,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5개 언론사 노조 총파업의 여파로 설치됐으나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회피를 하고 민주당도 열의를 보이지 않아 9월 말 시한이 자동 종료됐고, 11월 말로 연장이 되었으나 또 다시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릴 위기에 놓여있다.

언론노조는 11월 한 달 동안 국회공정성특위의 성과를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전개해왔고 22일에는 180여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이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위원장 정견발표와 함께 공대위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전국조합원 총회

일시 : 2013년 11월 29일 (12:00~18:00)

장소 : 본관 시청자광장 (민주광장)

박만, 권혁부 또 <추적 60분>에 중징계

불방사태를 겪었던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편이 끝내 방통심의위에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추적 60분> 징계가 안건으로 올라갔고, 2시부터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연대, 민연련 등은 방통심의위의 정치·표적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시부터 전체회의가 시작됐고, 김현석 KBS본부 위원장, 홍기호 부위원장, 홍진표 PD연합회장 등이 방청을 신청해 회의결과를 지켜봤다.

회의는 한 마디로 말해 '가관'이었다. 회사에서 불방의 이유로 든 것이 재판중인 사건이라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날 여권 추천위원들은 논리가 공색했는지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재판중인 사건도 보도할 수 있다. 그런데 <추적 60분>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제작됐다. 때문에 <추적 60분>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시종일관 강변하며 징계를 밀어붙였다. 부위원장인 권혁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유우성 씨가 간첩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고는 "이례적으로 거액의 해외제작비를 써가며 (유씨가) 무죄임을 전제로 취재를 했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일종의 여론재판이다"라고 억지를 부렸다. 취재 내용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 그는 역시나 최고 징계인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주문했다. 박만 위원장 역시 "추적 60분은 한쪽의 주장만 사실로 인정해 버려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가 하면 "국정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 (국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서면 답변을 보냈다). 다른 여권 추천 위원들(방통심의위 여야 위원은 6:3) 역시 <추적 60분>이 불공정하다고 앵무새처럼 지껄이며 재판기처럼 '경고'판정을 내렸다. 국정원의 심기를 건드려서인지 애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강경 징계가 나왔다. 향후 방통위 재심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 막장 정치·표적 심의를 분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추적 60분>에 중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6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자.

박만(위원장) : 경고 / 권혁부(부위원장) : 경고 및 관계자 징계 / 엄광석 : 경고 / 최찬묵 : 경고
구종상 : 경고 / 박성희 : 경고 / 김택곤:문제없음 / 장낙인 : 문제없음 / 박경신 : 문제없음